

전남 출신 안보·경호 책임자...호남 인재 중용 기대감

李대통령, 안보실장·경호처장 인선 균형발전 실현 지역인사 발탁 필요
다선 의원·당선 기여도 중심 하마평
“능력 중심” 기조에 제한적” 관측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6명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핵심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이 중 2명을 광주·전남 출신으로 지명하자, 향후 추가적인 호남 인사 중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인사의 원칙으로 ‘능력 중심’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낸 호남 민심에 화답하고,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 인사 발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인선안을 발표했다. 광주·전남 출신 인사로는 안보실장에 전남 장흥 출신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에 전남 보성 출신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임명됐다.

첫 인선부터 광주·전남 인사가 포함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추가 기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주요 부처와 검찰총장 등 사정 라인 인사에서 호남 출신 인물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다.

실제 새 정부의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후보로는 광주 지역 초선 의원인 양부남(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박군택(광산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고검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제22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아 사법 리스크 대응의 최전선에 섰고, 박 의원은 당 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하던 2023년 9월 이 대표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다만 두 의원 모두 장관직 등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비(非)법조

인 출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한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비법조인 출신이면서 법사위 경력이 있는 윤호중(5선·경기 구리) 의원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다.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총괄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다.

박군택 의원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하마평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그는 “현재 광산구 초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정치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인사를 추구하는 만큼 적절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내란잔당 선거공작저지단 단장으로, 최근 터진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밝힌 데 기여한 전남 나주 출신의 박선원(부평을) 의원은 대통령실 외 교안보수석 등으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아 ‘K-방역’의 선구자로 불리는 함평 출신의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물망에 오른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자 이재명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은 3선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거론된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 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을 맡아 이 당선인과 지방 소멸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이른바 ‘전명’계 정치인이다.

3선 중진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서 의원은 전남도위원과 3선 무안군수를 거쳐 21대 국회 상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재정·예산통’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기획재정부 분리에 따른 예산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질 경우 해당 부서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 또는 차관급 인사로는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과 임선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거론된다.

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K-이니셔티브 위원장을 맡았고, 임선 최고위원은 배우자실 실장으로 활동하며 김혜경 여사의 공식 행보를 총괄한 바 있다.

지난 3월 ‘채용 비리’로 직위를 상실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 또한 군수 재임 기간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재생에너지와 기본 소득에 앞장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만큼 복권 및 깜짝 입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광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친명 외곽조직 역할을 해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고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강 고문은 대선 기간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호남특보단장 겸 총괄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부분부장직을 맡는 등 핵심 실무를 도맡아왔다.

다만 이 대통령의 ‘능력 중심’ 방침과 함께 대선 기간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중앙당 핵심 인사들의 기용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 안배 인사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지역 정가 내부에서도 “상징적인 기용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능력치 등 다양한 조건을 우선해 기용할 경우 대대적인 호남 인사 중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인선은 능력 중심이라는 인사 원칙과 대선 압승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 응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중용 여부는 ‘호남 홀대론’ 불식을 넘어, 차기 총선 및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는 만큼 이 당선인의 향후 추가 인선이 지역 민심과 국정 운영 기조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광역시가 4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외벽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건 가운데 시원하게 내뿜는 5·18민주광장 분수대 사이로 축하 비행이라도 하듯 까치가 날고 있다.

김양배 기자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합니다.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매년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 바친 이의 충성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열들이 남기신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땀을 잊지말고 살아갑시다.”

송하전업사

대표 박 영 동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18-1(산정동1341-1)

전화 : 061-276-3721 전송 : 061-245-0599, 061-245-0548



(사진설명 : 전쟁기념관 6·25 조형물 호국군상)